

# 검찰, 구속영장 청구... MB 운명 이제 '법원의 손'에

뇌물수수 등 혐의 18개 안팎  
이르면 21일 영장심사해 결정  
다스 실소유 등 알았는지 관련



100억원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

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 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다.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쑥추기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 따를 절차를 거쳐서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

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심사 끝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 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 혐의 부인

두번째 출석 “조사 충실히 받겠다”  
‘업무 관계 악용’ 등에 조사 초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며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고 답하며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다.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출석한 안 전 지사에게

충남도 정부비서 김지은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력 관련 의혹과 경위, 입장 등을 캐물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충남도청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다음날인 9일 서부지검에 출석해 9시간 30분 가량 조사 받았다.

검찰은 당시 그의 출석이 사전 조율 등 준비 없이 진행됐고, 이후 A씨의 고소가 추가 제기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고소인들이 안 전 지사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그가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했다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약하거나 혼란하게 할만한 방법을 썼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조사는 두 번째인만큼, 검찰은 진술 내용과 소명 정도 등을 따진 뒤 신병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인 6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씨 측은 6일 안 전 지사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7일 주장하고 14일 그를 고소했다.

/이법종 기자

##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점수 조작’

산입부, 이달말까지 퇴출조치  
최종면접 탈락 17명 재직 확인

최근 정부가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을 면직 처분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부정합격자 전원의 점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을 이달 말까지 퇴출조치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입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산입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산업부 감사인력 10명, 강원랜드 10명 등 총 20명의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 2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산입부에 따르면 2013년 강원랜드 하위원 교육생 선발 때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정부 조사 결과 이 가운데 493명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자로 나타났다. 이 중 226명은 당초 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탈락자임에도 점수 조작으로 합격처리돼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이원 교육생 2차 선발과정에서는 부정행위에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21명)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재차 청탁압력을 넣어 추가 합격돼 현재 17명이 재직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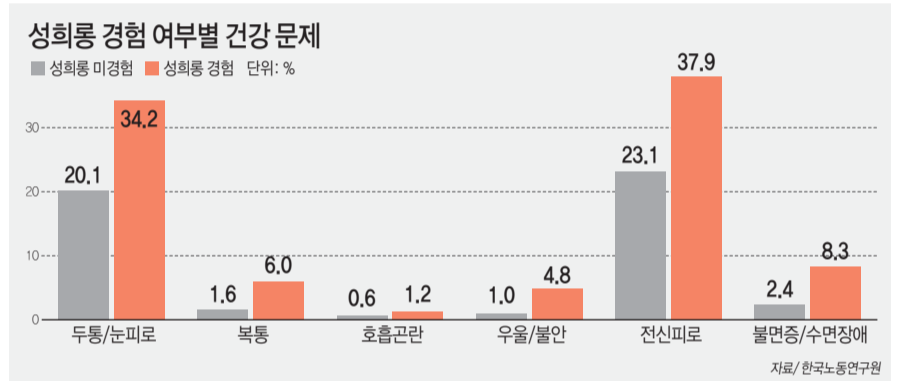
또 2013년 11월 강원랜드 워터월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는 국회의원 전 비서

관의 부정채용을 위해서 맞춤형 채용조건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최종 부정합격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강원랜드 점수 조작 부정합격자 퇴출조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산입부 관계자는 “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비해 피해자 구제 등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정합격자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성희롱·추행 피해자 두통·우울증 등 시달려

노동부, 근로환경조사 분석

‘복통’ 미경험자의 3배 ‘우울’ 5배  
직무만족도도 절반 수준밖에 안돼

최근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MeToo: 나도 고발한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들이 두통과 불안장애, 전신피로 등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환경조사 제4차년도 자료(2014)’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희롱 경험집단과 미경험집단을 구분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두통 또는 눈의 피로를 겪고 있다는 성희롱 경험자들의 비율이 34.2%로 성희롱 미경험자들(20.1%)보다 높았다.

또 성희롱 경험자들 가운데 복통을 앓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로 성희롱 미경험자들(1.6%)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

도 1.2%로 성희롱 미경험자들(0.6%)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피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 증상인 우울증의 경우, 성희롱 경험자들 가운데 우울 또는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8%로 성희롱 미경험자들(1.0%)보다 무려 네 배 이상 높았다.

성희롱 경험자들 가운데 전신피로 증세를 겪고 있다는 비율도 37.9%로 성희롱 미경험자들(2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자들과 미경험자들의 직무만족 정도를 비교해 보면, 성희롱 경험자들의 점수는 0.112점으로 미경험자들의 0.274점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돼 성희롱 경험이 직무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을 통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나이가 어릴수록, 미숙련 노동자들이 숙련자들에 비해 성희롱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최신용 기자

## 여성 외국인노동자 성희롱·폭행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 사업장 504곳 대상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504곳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성폭력 집중 합동 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일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 중 농축산·어업 분야 사업장 비율은 약 70%,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고용부는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폭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해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무 실태와 고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